

F1대회 전방위 감사 절차와 쟁점

공사비 추가·횡행 참패 등 '총체적 부실' 점검

도의회 19~22일, 감사원 내달 한달간

공사장 건설 지연·행사 운영도 도마에

감사원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전국 국제행사에 대한 감사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빚어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해석이다.

이 기간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의 감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경주장 건설 지연 문제 ▲입장권 및 스폰서십 유치 등 마케팅 방안 ▲교통 대책 등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F1

대회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감사원, 철저히 점검할 듯=감사원 감사는 이날 말 전남도에 감사 실시를 공식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감사원 감사는 이번 F1 대회가 '부실' 평가를 받게 된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F1 경주장 사업계획 단계부터 경주장 설계·계약·시공 및 공정 지연 등 시설 및 회계·운영 등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다, 전남도와 함께 종합 감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은 해당 부서를 통해 F1 대회운영법인인 KAVO의 지분구조, 경주장 건설에 들어간 국·도비 규모, 대회 진행 과정에 들어간 예산 내역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하는 등 '위밀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감사 착수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장 건설에 34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변변한 해명조차 없이 추가 공사비로 1025억을 부담해야 하는 점, 예상 수익(745억)을 훨씬 밑도는 수익 창출 등 '횡행 참패'를 빚은 원인,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진 사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경주장 건설 지연에 따른 국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F1 지원본부와 KAVO는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없다"고 장담해왔다는 점에서 안이한 대응에 따른 책임 규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도의회도 감사=전남도도 24일 자체 감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종합감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8명의 감사전문위원들을 투입해 감사에 들어가는 셈이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광주전남지방연맹 등 각계에서 F1 대회를 '총체적 부실'로 평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감사도 감사원 감사 시작 전까지 대회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대회운영법인인 KAVO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마케팅 프로모션·경주장 건설 등의 업무를 KAVO가 맡아왔지만 불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전남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F1지원본부와 F1조직

위원회가 전남도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감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도 철저한 감사를 버리고 있다. KAVO 등에 요구했던 51개 추가 자료까지 확보한 만큼 이제 하나 하나 뒤집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수사 의뢰라는 배수진까지치고 야근과 합숙을 하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가 여지껏 각종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집행부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받아온데다, 수천억원의 쏟아붓고도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벌써 이번 감사의 골격은 '단죄'가 아닌, '반성의 감사'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을 이유로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결함기식 감사'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목회 현금으로 후원금 전달

의원 8명 보좌관에...검찰 '대가성' 판단

민주 최인기 의원 비서관 첫 자진 출두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검찰이 기소한 청목회장 최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2009년 11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4) 씨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18일 운 정황과 단서를 포착해 16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최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실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로부터 국회 행안위, 법사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

을 기준으로 이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후원금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자진출석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실 비서관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2차례로 나눠 입금받은 경위와 이를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지만 1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수사에 정당하게 응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같은 당 유선호, 조경태 의원실도 검찰의 수사협조요청을 받고서 출석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다음주부터 후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8일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준공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라도지사,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성웅 광양시장, 박노선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준공을 알리는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양=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SOC 외면 ‘낙후 전남’ 악순환”

박준영 지사 광양항 배후시설 준공식서 '전남 소외' 이례적 토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8일 자신이 라도 한 듯 정부의 '전남 소외'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18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준공식' 행사에서다.

이날 행사는 남해고속도로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화물 전용도로를 확보해 물류수송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화물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양항 배후수송망이 17년 만에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박 지사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SOC 시설이 없으면 그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인데, 그 정확한 사례가 전남"이라며 발언을 열었다.

박 지사는 이어 "전남은 지난 1960

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면서 "기업들은 SOC 시설이 없다고, 또 거리가 멀다며 전남을 기피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전남에 SOC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이 아닌 경부축 위주의 거점생산방식으로 진행된 국토 개발방향이 낡은 결과"라며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지사는 그러면서 "2012년 여수 엑스포를 불과 1년6개월 앞두고 전주~광양,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예산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도 타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의 이날 발언은 행사 환영 사치고는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특히 박 지사가 이날 담당 부서에서 준비한 원고를 직접 고쳐가며 발언 수위를 한껏 높인 데 대해 2012 여수박람회 및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열악한 SOC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광양항 및 전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총리 1시간 30분 공항서 대기한 까닭은?

광양·여수 방문길 수능 겹쳐 시간 조정

1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1시간 30분이나 공항에서 대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김 총리가 이날 전국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광양항 배후시설 및 여수 세계박람회 현장 방문 계획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을 출발해 성남공항으로 향한 뒤 여수공항으로 갈 계

획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까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새벽 6시20분께 미리 공관을 나섰다.

총리 차량이 지나가면 그 일대 교통신호가 조정돼 수험생들의 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7시에 성남공항에 도착, 조찬 등을 하며 65분을 대기한 끝에 8시5분 전용기에 올랐다.

또한, 수능 듣기평가와도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김 총리는 아예 이륙 시각을 앞당겨 여수공항에서도 25분 동안 머물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이날 1시간30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게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평소 총리의 일정은 분 단위로 분할되며 65분이나 대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혹시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나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총리의 작은 배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